

상시 · 지속적인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

새누리의 진단

-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의 1/3이 비정규직으로, OECD 국가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임.
-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시 직접고용 의무 부과하고 있으나, 정규직 전환률은 낮음.
- 제조업에서 상시 · 지속적인 업무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남용하는 고용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.

새누리의 약속

-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.
- 공공부문부터 상시 ·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.
-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유도

새누리의 실천

- 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

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

새누리의 진단

-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고, 사내하도급 계약 변경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.
- 사내하도급이 적법한 도급일 경우,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시정제도나 고용안정 보호를 받을 수 없음.
- 제조업 등에서 사내하도급 형태로 위장해서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경우도 존재

새누리의 약속

- 「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」을 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·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
- 사내하도급 계약 만료시에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보호
-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

새누리의 실천

- 「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」 제정
-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

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

새누리의 진단

-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업이나 재해 위험이 높고, 노후대비도 취약하지만, 고용보험·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40% 수준에 불과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음.
- 현재 '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'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 125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나, 아직도 미가입률이 높은 상태

새누리의 약속

- 월급여 130만원 미만(2013년 기준)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를 100%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

새누리의 실천

-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만명의 보험료 정부지원

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

새누리의 진단

-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위탁,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.
 - ※ 특수고용직 근로자 : 골프장 캐디, 학습지 교사, 레미콘 운송차주, 보험모집인, 택배(퀵서비스)기사, 대리운전, 텔레마케터 등
-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사고 위험, 고용 불안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호가 절실함에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
- 현재 골프장 캐디 등 일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실정임.

새누리의 약속

-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
-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

새누리의 실천

- 「산재보험법」 개정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적용대상 포함
-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는 고용보험제도 신설

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

새누리의 진단

-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고,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요한 제도임.
- 최저임금이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매년 노사 갈등이 반복돼 왔음.

새누리의 약속

-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,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
-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,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

새누리의 실천

- 「최저임금법」 개정